

“신호 기다리다 땀범벅”…자치구 그늘막 설치 ‘불균형’

광주 868곳 중 광산 235곳·동구 119곳 2배 차이
설치기준·도로여건 영향…생활권 중심 확충 필요

역대급 폭염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들의 불편이 커지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구별 그늘막 설치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특별자치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광주지역에 설치된 그늘막은 모두 868개소다. 이 가운데 고정형이 679개소, 스마트 그늘막이 189개소다.

자치구별로는 광산구가 235개소(고정형 153·스마트 82)로 가장 많았고, 서구 201개소(193·8), 북구 184개소(158·26), 남구 129개소(80·49), 동구 119개소(95·24) 순이었다. 가장 많은 광산구와 가장 적은 동구는 설치 규모가 약 두 배 차이를 보였다.

폭염이 일상이 된 만큼 시민들은 그늘막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화정동에 거주하는 김모씨(30)는 “횡

단보도에서 신호를 한 번 기다리는 동안에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며 “이제는 그늘막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시설인 만큼 보행자가 많은 곳부터라도 더 많이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늘 공간 확대 필요성은 구의회에서도 제기됐다.

홍두석 동구의원은 지난달 28일 제32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계림동에서 산수동, 동명동을 거쳐 남광주까지 이어지는 푸른길을 걸어보면 운동하는 어르신과 등하교하는 학생, 유모차를 미는 부모들을 자주 마주친다”며 “그늘이 부족한 구간이 많다. 나무를 심는 것을 넘어 푸른길공원 중·장기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구별 설치 규모에 차이가 나는 것은 행정 의지보다 면적과 도로 여건, 예산 구



12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 북구 용봉동 한 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시민들이 그늘막 아래 모여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늘막은 크게 고정형과 스마트형으로 나뉜다. 고정형은 파라솔 형태로 수동 개폐 방식이며, 스마트 그늘막은 사물인터넷

(IoT)과 태양광 기술을 적용해 일정 기온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펼쳐지고 야간에는 조명 기능도 수행한다.

설치 비용도 차이가 크다. 고정형은 1곳 당 150만~180만원, 스마트형은 880만~

940만원 수준으로 5배 이상 비싸다.

올해 자치구별 관련 예산은 광산구가 4억67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 1억5100만원, 북구 1억2600만원, 남구 6500만원, 서구 4500만원 순이다.

추가 설치도 이어지고 있다. 동구는 고정형 6개와 스마트형 12개, 서구는 고정형 15개, 북구는 고정형 10개와 스마트형 1개, 광산구는 스마트형 42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다만 모든 횡단보도와 보행로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행정안전부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에 따르면 도로 폭 4m 이상인 주요 간선도로 횡단보도와 인도 폭 3.5m 이상인 구간을 중심으로 설치해야 하며,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주변 건물로 인해 자연 그늘이 형성되는 곳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치구 관계자는 “대규모 유동인구 밀집지역과 초등학교, 유치원생,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의 주요 이동 경로, 교통량과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있다”며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만큼 데이터 기반의 폭염 저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주민 안전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GGM 노사, 단체협약 집중교섭 결렬

32차례 협상…노조 “시 개입을” vs 사측 “상생협정 준수”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가 장기간 중단됐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한 달 넘게 집중교섭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2일 GGM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GGM지회에 따르면 노사는 중단됐던 2024년 단체교섭 타결을 위해 지난달부터 집중교섭을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법정 근로시간면제 한도인 4000시간에서 상당 부분을 조정할 타협안을 제시하고 상여금과 명절귀향비 등에서도 양보안을 내놓으며 일괄 타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조가 요구한 근로시간면제(500시간)와 노조 사무실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지난 11일까지 32차례에 이르는 교섭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조는 결국 “교섭 결렬”을 공식화했다.

이후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특히 노조는 집중교섭 종료 직후 회사가 그동안 제공했던 교섭위원 사무실과 주중 3일 유급 적용 조치까지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며 “회사가 스

로 교섭을 통한 타결 가능성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제심 판정을 근거로 사측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 측의 무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GGM 측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교섭위원 4명에게 주 3일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하고 노조 사무실까지 제공하는 등 성실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임했다”며 “타인오프 500시간과 사의 노조 사무실 제공은 고용 유지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최선의 안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GGM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준수해야 하는 상생형 일자리 기업”이라며 “노조가 회사의 설립 배경과 경영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설립 취지에 맞게 노사 간의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경찰, 청문감사담당관 전원 ‘상피제’ 적용한다

광주·전남 14명 대상…보완수사 대응 전담부서 운영

경찰이 시도경찰청의 감사·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대상으로 ‘상피제’를 적용한다.

경찰청은 12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상피제’를 적용해 지역 경찰 조직과의 연고 관계가 감사·감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수사 인력도 보강한다. 경찰은 앞서 논의한 881명에 더해 수사 부서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생치안엔 차질이 없는 분야의 인력을 내부 조정해 수사 부서에 우선 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기동대 130개 부대의 정원을 10%가량 줄여 확보한 인력을 수사·민생

치안·내무통제 분야 등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합수사팀 645명, 여성·청소년 수사 80명 등 총 1040명을 재배치하게 된다.

다만 이미 881명을 수사 부서에 재배치하기로 한 데 이어 추가 보강까지 단행하면서 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에 대한 내부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주·전남 경찰청에 소속된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각각 6명, 8명이다.

경찰은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규 채용을 통한 수사 인력 증원 논의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관리부실 공무원 2명 송치

건설노동자 등 4명이 사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의 ‘관리 부실’ 책임자로 지목된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 소속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의 발주처인 시종합건설본부 담당 팀장 또는 실무자인 이들은 지난해 12월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철재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철골 구조물 접합부의 용접 불량과 품질관리 실패가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일부 용접 부위는 설계 기준에 크게 미달했고, 무자격 용접공이 작업에 투입된 사실도 드러났다. 시공사와 감리 측이 불

량 시공 정황을 확인하고도 충분한 점검과 보완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다만 경찰은 분부장 등 종합건설본부 고위직 2명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다.

시공사·하청업체·감리단 관계자 등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11명(구속 4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첫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선한병원 회생절차 개시

200억대 채무 등 경영난

경영난에 시달리며 임금체불과 응급실 운영 중단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한병원이 회생 수순을 밟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회생법원은 최근 선한병원 대표원장 A씨가 신청한 회생절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명령을 내렸다.

앞서 선한병원은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지난달 광주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병원 법인의 재산 처분 등을 제한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지난달 16일에는 병원장 등 채무자에 대한 신분기밀을 진행했다.

법원에 신고된 선한병원의 채무는 2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며 채권자는 금융기관 등을 포함해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병원 측은 정상화를 위한 후속 작업에도 착수했다.

대표원장 A씨는 최근 채권자 회생채권 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6월과 7월분 재직 직원 급여 잔여분 지급 허가 신청서와 신규 직원 3명 채용 허가 신청서 등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기존 직원들의 급여 지급과 필수 인력 확보 등 병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임영진 기자 looks@

아카데미홀 대관

-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 북구 무등로 254(광남일보 사옥 1층)
- 스크린 및 음향 최고시설 완비
- 교육연수, 연회, 세미나 등
- 시설 사용인원(최대) : 150명
- 대관료 : 오전 10만원/시간 · 오후 20만원/시간
※ 오전·오후 이용시간은 별도 문의

